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 속 한국 수산물 수출의 길

한국수산물경제 | 승인 2025.08.25 08:47



장유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

최근 세계 무역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수입 금지 조항과 수입 제재조치 그리고 미국의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우리 수산물 수출업계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우선 안전성 이슈에 따른 수입 금지 조항이 강화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여러 국가의 전면 수입 금지조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제한 등으로 수출 대상국의 최신 검역과 위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증명 등의 각국제도 변화에 면밀히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더불어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는 수입 제재조치도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위생과 품질은 기본이고 노동 환경, 어획방식, 환경 영향, 공급망의 투명성까지 확인하려 한다. 단순한 서류 검토만이 아니라 외부 조사기관의 제보나 국제 NGO의 보고서가 그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 경우 입증책임은 수출업체에 있다.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의심이 제기되면 수입 자체가 보류되거나 통관이 불허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어서 수출업체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중소 수출업체일수록 이런 제도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생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 신경을 써야 하며 위생검사, 인증, 물류 대응까지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이제는 일부 국가나 일부 품목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수산물 수출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조건을 하나의 전제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에 최근 미국이 다시금 부상시키고 있는 것이 트럼프식 보복관세다. 우리 수산업계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또는 과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확대할 경우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무역 규제 속에서 우리 수산물 수출 산업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현지화 전략이 필수다. 각국 법규와 검역기준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현지 소비 트렌드에 맞는 제품 개발, 그리고 안정적 원산지 증명체계 구축 등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업계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출 확대를 위한 여러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수출위생검사비 지원, 국제인증 취득 보조,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수입국 정보 메뉴얼 제공, 무역상담소와 해외 무역지원센터 운영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은 단지 정부가 준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제도들이 충분히 활용되려면 수산업체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준비해야 한다. 수출업체로서 수입국 기준에 맞춰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 인권·노동환경의 선제적 점검, 인증절차의 국제화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준비는 선택이 아닌 국제시장에서의 전제조건이다. 훌륭한 제도가 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업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앞으로의 수산물 수출은 단순히 신선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공정 과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수입국의 정치와 경제 상황까지 살펴야 하는 시대다. 변화에 대한 속도가 빠르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수산업계가 이런 흐름을 외부의 규제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변화무쌍한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먼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과정을 마련한다면 오히려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수출을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수산경제